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2018.5.16.(수)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 (02-2100-2680)		<b>담 당 자</b>	차 영 호 사무관 (02-2100-2683)	

## **제 목 : 한겨레 5.16일자 「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 ‘삼성 바이오와 직간접 인연’ 」 제하의 기사 관련**

### < 기사 내용 >

- 한겨레는 5.16일자 “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 삼성바이오와 직간접 인연” 제하의 기사에서
  - “당국 안팎에선 송 변호사가 제척된 사유에 다른 배경이 있다는 의구심도 불거지고 있다. 송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금감원 법무실에서 근무했다.”
  - “송 변호사가 ‘고의적 회계분식’을 저질렀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금감원 쪽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꺼려 제척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”고 보도
  - 아울러, 비공개 원칙인 감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수록

### < 보도 참고 내용 >

-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 브리핑(5.15일 14시) 등을 통해 감리위원회 위원 1명의 제척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.
- 금융위 규정\*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재차 밝힙니다.

※ 외부감사규정 §30 ②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  2.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- ③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- 당사자의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해왔으며,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.
- 참고로, 위원의 금감원 근무 경력은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, 이번 건에서 제척되지 않는 민간위원 중에도 금감원 근무 또는 자문교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 드립니다.

□ 감리위원회의 경우 「행정기관위원회법\*」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 위원회이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.

\* 제15조(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...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,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금융위원회는 감리위 등 자문기구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비록 上記 보도로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되어 회사측이나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,  
- 감리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5.17일로 예정된 회의를 정상 개최할 계획입니다.

□ 누차 말씀드린대로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